2025. 9. 15.(월) 14:30
서울청사(본관) 브리핑실(311호)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일터

『노동안전 종합대책(안)』

브리핑문

◇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문입니다.

※ 본 자료는 **보도 참고용**으로 보도시 **실제 발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엠바고는 9.15.(월) 브리핑 시작 시 해제**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 등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존 대책들은
근본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단하여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관리 책임 분산,
일하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 제약,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등
산업재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첫째,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둘째,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셋째, 안전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넷째,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하여,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재정, 인력,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733억원 증액한 2조 7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등 안전설비 지원에 43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R&D를 통해 AI 기반 안전기술·제품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현재 50인 이상에서
더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명안전 인지도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안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부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모국어에 기반한 기초안전교육을,
사업주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사고 비중이 높은 외국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며,
장기 근속 등 역량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산업안전보건법」보호 범위는 확대하면서 고령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28년까지 총 61만개소 사업장을 점검·감독하겠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과 연계하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독 역량·경험이 있는 공공, 민간분야 퇴직자 1천명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해 18만 개소 영세사업장에 투입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소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를 확립하겠습니다.

도급 계약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하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민간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의무주체를 원청까지 확대하여 하청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포함하여, 계약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공사 각 단계별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부터
안전을 준수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을 위한 배점은 대폭 상향하고,
원청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관련 지표를 바꾸겠습니다.

일터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업의 재해현황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9.4)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서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던 만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작업중지권도 노동자가 직접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 행사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안전감독관의 양적·질적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전국적 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 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충원하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술직군 채용을 70%까지 확대하고, 임용 직후부터 촘촘한 멘토링, 도제식 훈련, 경력별 체험·실습형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경력관리 특화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하고 부실기관은 퇴출시키겠습니다.

인력·조직과 함께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29일부터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에 대해
신고해 주신다면 파격적으로 포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그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 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습니다.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하여
사업장에 환류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全 분야(시설공사, 물품용역 등)에서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신심사, 보증 및 자본시장 평가에서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거나 참고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습니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일부터는 감독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즉시 이행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입법·예산 과제에 대해 재정 당국·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안전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현장을 자주 찾고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전한 일터를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또한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민관이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여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